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계 도입〉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7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목 차

|                                                 |    |
|-------------------------------------------------|----|
| I. 제안 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총괄 검토 .....                                  | 3  |
| 가. 개정안의 개요 및 필요성 .....                          | 3  |
| 나. 개정안의 구성 체계 .....                             | 8  |
| 2. 조문별 검토 .....                                 | 14 |
| (1) 총칙(안 제1장) .....                             | 14 |
| 가. 목적, 책무, 경찰의 임무 등(안 제1절, 제1조~제5조) .....       | 14 |
| (2) 국가경찰(안 제2장) .....                           | 18 |
| 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임명 등(안 제1절, 제6조~제10조) ..... | 18 |
| 나. 시·도경찰(안 제4절, 제18조~제21조) .....                | 23 |
| 다. 비상사태 등에서의 통합지휘(안 제5절, 제22조) .....            | 31 |
| (3) 자치경찰(안 제3장) .....                           | 38 |
| 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안 제1절, 제24조~제32조) .....           | 38 |
| 나.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안 제2절, 제33조~제40조) .....        | 49 |
| 다.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안 제3절, 제41조~제43조) .....           | 66 |
| 라. 경찰 상호 간의 관계(안 제4절, 제44조~제49조) .....          | 72 |
| 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감독(안 제5절, 제50조~제59조) .....       | 78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04. 28.
3. 회부연월일 : 2026. 04. 2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이원화 모델’로 운영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권이 여전히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경찰 중심의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민주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특히,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대규모 수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및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민생수사 사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이러한 이원화 구조 아래에서도 자치경찰이 직무 수행 중 국가경찰 소관 범죄를 발견할 경우 즉각 증거 보존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였음.

또한, 112종합상황실을 통한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사태 시 통합 지휘 체계를 마련하여 경찰권 이원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 Ⅲ. 검토의견

#### 1. 총괄 검토

##### 가. 개정안의 개요 및 필요성

현행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을 제외하고는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인사·예산 및 지휘체계는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현행 체계에서는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안행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지역별 치안수요와 생활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치안정책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별도의 인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실질적으로 이원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치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경찰은 국가안보·정보·외사 및 광역적·전문적 수사사무 등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및 일부 민생수사 사무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치안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음. 또한 자치경찰이 직무 수행 중 국가경찰 소관 범죄를 발견한 경우 현행범 검거, 증거보존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응원 및 통합지휘체계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조직 분리에 따른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은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태료·범칙금 징수액에 상당하는 국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와 자치경찰공무원의 처우 보장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음. 이는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개정안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중심 구조 아래에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자치경찰의 독립성 및 책임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분권 확대와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입법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음.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체감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을 실질화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단순히 자치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치안체계 전반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우선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고 인사·예산·장비·통신체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기존 국가경찰 조직과의 기능 중복 및 인프라 이원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도 존재함.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더라도 그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과태료·범칙금 징수액에 연계된 국가보조금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개정안은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도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지도·감독,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바, 자치경찰의 자율성과 국가의 감독권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고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구조는 지역 치안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찰권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강제력을 수반하는 대표적 공권력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 있음. 특히 시·도지사가 위원 임명권 및 위원장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 운영이 지방정치 환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를 구분하더라도 실제 치안현장에서는 범죄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 관할 충돌이나 책임소재 불명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생활범죄와 강력범죄가 혼재된 사건이나 광역적·연쇄적 범죄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건 이첩 및 협력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이 범죄의 중대성·광역성·연쇄성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판단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관할 판단이나 사건 이첩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특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체계 및 비상시 통합 지휘체계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평시에는 조직과 사무를 분리하면서도 긴급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지휘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경찰청장이 일정한 경우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국가 치안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될 경우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결국 개정안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중심 구조 아래에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입법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국가 치안체계의 통일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 간 재정 격차,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수사체계 혼선 등의 문제도 함께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권한 배분의 적정성, 협력체계의 실효성,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및 통제장치 등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나. 개정안의 구성 체계

개정안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를 개정하는 형식으로, 본문 제1조부터 제59조까지 총 5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행법이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국가경찰 체계 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재구성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2장 국가경찰(안 제6조부터 제23조까지), 제3장 자치경찰(안 제24조부터 제59조까지)의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제3장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를 반영하여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②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 ③ 자치경찰의 직무 수행, ④ 경찰 상호 간의 관계, ⑤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감독 등을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경찰의 임무 및 권한남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총칙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사무를 이후 장에서 각각 규정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재편하고 있음.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관련 정책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협조 및 조정 사항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는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을 국가경찰 장(章) 내로 편제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조정 기능을 함께 규정하는 구조를 취한 것임.

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는 국가경찰의 조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13조는 국가경찰사무를 국가안보·정보·보안·외사 및 국가적 차원의 수사사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별도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및 치안분야 연구개발 지원 규정도 국가경찰 장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 설치와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의 임명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조직인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구조와 달리, 자치경찰 조직 자체를 별도로 두는 체계를 규정한 것임.

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는 112종합상황실, 자치경찰의 사무,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자치경찰 활동목표의 수립·평가 및 자치경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무기와 장비의 사용 및 범죄 발견 시의 조치 등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상호 협조 및 응원, 112 신고출동, 경찰통계, 치안행정협의회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안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에서는 예산·처우, 자치경찰특별회계, 지도·감독,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감사, 재의요구, 자치경찰지원관 및 법률안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감독 체계를 별도의 절로 마련하고 있음.

### < 개정안의 조문 구성 >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구분(장·절)     | 조 항  | 내 용                     | 구분(장·절)                 | 조 항  | 내 용                     |
| 제1장 총칙      | 제1조  | 목적                      | 제1장 총칙                  | 제1조  | 목적                      |
|             |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제3조  | 경찰의 임무                  |                         | 제3조  | 경찰의 임무                  |
|             | 제4조  | 경찰의 사무                  |                         | 제4조  | 권한남용의 금지                |
|             | 제5조  | 권한남용의 금지                |                         | 제5조  | 직무수행                    |
|             | 제6조  | 직무수행                    |                         |      |                         |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 제7조  |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 제2장 국가경찰<br>제1절 국가경찰위원회 | 제6조  |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
|             | 제8조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                         | 제7조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
|             | 제9조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 제8조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             | 제10조 |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                         | 제9조  |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
|             | 제11조 |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 제10조 |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구분(장·절)                     | 조 항  | 내 용                             | 구분(장·절)                     | 조 항  | 내 용                              |
| 제3장<br>경찰청                  | 제12조 | 경찰의 조직                          | 제2절<br>국가경찰의<br>조직 및<br>사무  | 제11조 | 국가경찰의 조직                         |
|                             | 제13조 | 경찰사무의 지역적<br>분장기관               |                             | 제12조 |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br>장기관               |
|                             | 제14조 | 경찰청장                            |                             | 제13조 | 국가경찰의 사무                         |
|                             | 제15조 | 경찰청 차장                          | 제3절<br>경찰청                  | 제14조 | 경찰청장                             |
|                             | 제16조 | 국가수사본부장                         |                             | 제15조 | 경찰청 차장                           |
|                             | 제17조 | 하부조직                            |                             | 제16조 | 국가수사본부장                          |
| 제4장<br>시·도자치경<br>찰위원회       | 제18조 | 시·도자치경찰위원<br>회의 설치              | 제4절<br>시·도경찰                | 제18조 | 시·도경찰청장                          |
|                             | 제19조 | 시·도자치경찰위원<br>회의 구성              |                             | 제19조 | 시·도경찰청 차장                        |
|                             | 제20조 | 시·도자치경찰위원<br>회 위원의 임명 및<br>결격사유 |                             | 제20조 | 경찰서장                             |
|                             | 제21조 | 시·도자치경찰위원<br>회 위원추천위원회          |                             | 제21조 | 직제                               |
|                             | 제22조 | 시·도자치경찰위원<br>회 위원장의 직무          | 제5절<br>비상사태<br>등에서의<br>통합지휘 | 제22조 | 비상사태 등에서의 통<br>합지휘               |
|                             | 제23조 | 시·도자치경찰위원<br>회 위원의 임기 및<br>신분보장 | 제6절<br>치안분야의<br>과학기술 진흥     | 제23조 |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br>발의 지원 등           |
|                             | 제24조 | 시·도자치경찰위원<br>회의 소관 사무           | 제3장<br>자치경찰                 | 제24조 | 시·도자치경찰위원 회<br>의 설치              |
|                             | 제25조 | 시·도자치경찰위원<br>회의 심의·의결사<br>항 등   |                             | 제25조 | 시·도자치경찰위원 회<br>의 구성              |
|                             | 제26조 | 시·도자치경찰위원<br>회의 운영 등            |                             | 제26조 | 시·도자치경찰위원 회<br>위원의 임명 및 결격<br>사유 |
|                             | 제27조 | 사무기구                            |                             | 제27조 | 시·도자치경찰위원 회<br>위원추천위원회           |
| 제5장<br>시·도경찰청<br>및 경찰서<br>등 | 제28조 | 시·도경찰청장                         | 제1절<br>시·도자치경<br>찰위원회       | 제28조 | 시·도자치경찰위원 회<br>위원장의 직무           |
|                             | 제29조 | 시·도경찰청 차장                       |                             | 제29조 | 시·도자치경찰위원 회<br>위원의 임기 및 신분<br>보장 |
|                             | 제30조 | 경찰서장                            |                             | 제30조 | 시·도자치경찰위원 회<br>의 소관 사무           |
|                             | 제31조 | 직제                              |                             | 제31조 | 시·도자치경찰위원 회                      |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구분(장·절)                                               | 조 항  | 내 용                                         | 구분(장·절)                    | 조 항                         | 내 용                   |
|                                                       |      |                                             |                            |                             | 의 심의·의결사항 등           |
| 제6장<br>비상사태 등<br>전국적<br>치안유지를<br>위한<br>경찰청장의<br>지휘·명령 | 제32조 | 비상사태 등 전국<br>적 치안유지를 위<br>한 경찰청장의 지<br>휘·명령 |                            | 제32조                        | 시·도자치경찰위원 회<br>의 운영 등 |
| 제7장<br>치안분야의<br>과학기술진흥                                | 제33조 | 치안에 필요한 연<br>구개발의 지원 등                      | 제2절<br>자치경찰의<br>조직 및<br>사무 | 제33조                        | 자치경찰의 조직 및<br>정원      |
| 제8장 보칙                                                | 제34조 | 자치경찰사무에 대<br>한 재정적 지원                       |                            | 제34조                        | 자치경찰본부장               |
|                                                       | 제35조 | 예산                                          |                            | 제35조                        | 자치경찰대장                |
|                                                       |      |                                             |                            | 제36조                        | 112종합상황실              |
|                                                       |      |                                             |                            | 제37조                        | 자치경찰의 사무              |
|                                                       |      |                                             |                            | 제38조                        |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br>결      |
|                                                       |      |                                             |                            | 제39조                        | 자치경찰 활동목표의<br>수립 및 평가 |
|                                                       |      |                                             |                            | 제40조                        | 자치경찰의 운영              |
|                                                       |      |                                             |                            | 제41조                        | 「경찰관 직무집행<br>법」의 준용   |
|                                                       |      |                                             |                            | 제42조                        | 무기와 장비의 사용            |
|                                                       |      |                                             | 제43조                       | 범죄 발견시의 조치                  |                       |
|                                                       |      |                                             | 제44조                       | 상호 협조 및 응원                  |                       |
|                                                       |      |                                             | 제45조                       | 112 신고출동 및 응원               |                       |
|                                                       |      |                                             | 제46조                       | 경찰통계                        |                       |
|                                                       |      |                                             | 제47조                       | 조례 등의 통보                    |                       |
|                                                       |      |                                             | 제48조                       | 치안행정협의회                     |                       |
|                                                       |      |                                             | 제49조                       | 자치경찰 상호 간의<br>분쟁조정          |                       |
|                                                       |      |                                             | 제50조                       | 예산과 처우                      |                       |
|                                                       |      |                                             | 제51조                       | 자치경찰 특별 회 계 의<br>설치         |                       |
|                                                       |      |                                             | 제52조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br>지도            |                       |
|                                                       |      |                                             | 제53조                       | 자치경찰사무 중 국가<br>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                       |
|                                                       |      |                                             | 제54조                       | 시정명령                        |                       |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구분(장·절) | 조 항 | 내 용 | 구분(장·절) | 조 항  | 내 용           |
|         |     |     |         | 제55조 | 직무이행명령        |
|         |     |     |         | 제56조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
|         |     |     |         | 제57조 | 재의 요구         |
|         |     |     |         | 제58조 | 자치경찰지원관       |
|         |     |     |         | 제59조 | 법률안 의견 제출     |

## 2. 조문별 검토

### (1) 총칙(안 제1장)

#### 가. 목적, 책무, 경찰의 임무 등 (안 제1절, 제1조~제5조)

개정안은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경찰체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각 독립된 조직과 사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 체계 및 사무 범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제1장 총칙                                                                                          | (현행과 같음)                                                                                        |
| 제1조(목적) 이 법은 <u>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 제1조(목적) --- <u>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u> ---<br>----- <u>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u> -----<br>-----. |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략)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현행과 같음)                                                                    |
|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경찰의 임무) -----<br>-----.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u>&lt;삭 제&gt;</u>                                                                              |
|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6. -----<br>-----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br>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br>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br>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br>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br>인권을 보호하고, (후단 생략) | 7. -----<br>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br>-----<br>-----과 -----<br>-----<br>-----, (현행과 같음) |
| 제6조(직무수행) ① ~ ③ (생략)                                                                                                            | 제5조(직무수행) (현행과 같음)                                                                   |

우선 안 제1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이 국가경찰 중심 체계 아래 자치경찰사무를 일부 분담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독립된  
경찰체제로 운영하는 이원화 모델을 입법적으로 구현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경찰사무와 자치  
경찰사무의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사무 범위를 각각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상 총칙에서 규정하던 생활안전·교통·수사 등 자치  
경찰사무는 안 제37조 이하에서 별도로 규정되고, 국가경찰사무 역시  
안 제13조<sup>1)</sup>에서 독립적으로 규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동일 조문 내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던 현행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독립된 경찰체계로 전제하고 각 조직의 사무 범위를 별도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즉, 현행법이 국가경찰 중심 체계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일부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면,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각 고유한 사무를 담당하는 이원적 경찰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체계상의 변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 제3조제6호는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를 경찰의 일반적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총칙에서 삭제하고 안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교통행정을 자치경찰의 핵심 기능으로 배분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찰의 일반적 임무와 구체적인 집행사무를 구분하여 규율하려는 입법체계상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적 의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경찰사무의 특성상 생활안전·교통·수사 기능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행되는

---

1) 안 제13조(국가경찰의 사무) 국가경찰은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를 수행한다.

안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립·작성 및 배포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특히 개정안은 자치경찰 수사사무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광역성·연쇄성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sup>2)</sup>하고 있으나, 해당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관할 판단이나 사건 이첩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동일 사건 내에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기관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처리 지연이나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될 수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구분의 실효성 및 역할분담 체계가 실제 치안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직 재편이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sup>3)</sup>

---

2) 안 제37조(자치경찰의 사무) ③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안에 한하여 수사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범죄의 중대성, 광역성, 연쇄 등에 비추어** 국가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경찰 조직의 분리 없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분권의 실질적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왔음.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으며, 같은 달 경찰청 내 자치경찰기획단을 출범시켜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음. 이후 2025년 11월부터 권역별 현장간담회와 현장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일선 경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6년 상반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경찰청은 범정부협의체를 중심으로 세부

## (2) 국가경찰(안 제2장)

### 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임명 등(안 제1절, 제6조~제10조)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분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치안정책 조정 및 민주적 통제 기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제2장 <u>국가경찰위원회</u></p> <p><u>&lt;신 설&gt;</u></p> <p>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u>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u></p> <p>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u>비상임(非常任)</u>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u>상임(常任)</u>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③ (생략)</p> <p><u>&lt;신 설&gt;</u></p> | <p>제2장 <u>국가경찰</u></p> <p><u>&lt;제1절 국가경찰위원회&gt;</u></p> <p>제6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u>국가경찰 행정----- 제9조제1항 -----</u><br/>-----<br/>-----.</p> <p>② -----<br/>-----<br/>----- <u>비상임으로</u> -----<br/>----- <u>상임으로</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 중 1명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대</u></p> |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2026년 하반기 자치경찰제 확대모형과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지역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④ ~ ⑥ (생략)</p> <p>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연임(連任)</u>할 수 없다. (이하 생략)</p> <p>② (생략)</p> <p>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 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u></p> <p>6. <u>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u></p> <p>7. (생략)</p> <p>8. <u>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u></p> | <p><u>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u>의 추천자로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u>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u>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 ⑦ (현행 ④~⑥항과 같음)</p> <p>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br/>-----, <u>연임</u>-----<br/>-----. (이하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br/>-----<br/>-----.</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자치경찰에</u> -----<br/><u>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약</u>-----<br/>-----</p> <p>6. <u>시·도자치경찰위원회</u> -----<br/>-----, <u>자치경찰에 대한 지도·감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u></p> <p>7. (현행과 같음)</p> <p>8. <u>제22조</u>-----<u>에서의 통합지휘에 관한 사항</u></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9. (생략)                                                                                      | 9. (현행과 같음)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u>재의</u>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br>-----<br>-----<br><u>재의</u> -----.      |
|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 ①·② (생략)                                                                                     |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제9조--<br>-----<br>-----<br>-----<br>-----. |

개정안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본적인 설치 구조 및 운영 체계는 현행법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음. 즉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체계는 현행과 동일하며, 위원의 임기·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 의무 등도 현행 규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계를 반영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 사항 일부를 조정하고 있음. 특히 안 제7조제4항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의 추천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치경찰제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국가 차원의 치안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

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약체결의 조정, 자치경찰에 대한 지도·감독 및 주요 정책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분리하면서도 양 경찰체계 간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조정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분리하더라도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조정, 시·도 간 자치경찰 운영의 균형성 확보, 자치경찰제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등은 개별 시·도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자치경찰사무의 통일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국가적 차원에서 심의·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수 있음.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라면, 국가경찰위원회 역시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체계상 자연스러울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를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에 포함하고 자치경찰 관련 사항까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에 대한 통제기능뿐만 아니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적 조정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기능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체계와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별도의 조정기구를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시·도경찰(안 제4절, 제18조~제21조)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전제로 국가경찰 조직의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광역 단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임.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lt;신 설&gt;</u></p> <p>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p> <p>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p> <p>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p> | <p><u>&lt;제4절 시·도경찰&gt;</u></p> <p>제18조(시·도경찰청장) ① -----, -----·치안감 --- 경무관-----.</p> <p><u>&lt;삭 제&gt;</u></p> <p>② -----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p> <p>----- . <u>&lt;후단 삭제&gt;</u></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u></p> <p>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p> <p>&lt;신 설&gt;</p> | <p>&lt;삭 제&gt;</p> <p>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요건 및 지휘·감독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수사부서장을 통하여 지휘·감독하여야 한다.</p> |
| 제29조(시·도경찰청 차장) ①·②<br>(생략)                                                                                                                                                                                                                                    | 제19조(시·도경찰청 차장) ①·②<br>(현행과 같음)                                                                                                                                                                                                               |
| 제30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                                                                                                                                                                                                                                           | 제20조(경찰서장) ① -----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u>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u>으로 보한다.</p> <p>② (생략)</p> <p><u>&lt;신설&gt;</u></p> <p>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u>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u></p> <p>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u>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p> <p><u>제31조(직제) (생략)</u></p> | <p>-----, -----, <u>총경 또는 경정</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경찰서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u></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u>경찰서장이 예외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요건 및 지휘·감독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수사부서장을 통하여 지휘·감독하여야 한다.</u></p> <p>⑤ ----- <u>순찰대를 둘 수 있고,</u> -----</p> <p>-----</p> <p>----- <u>&lt;후단 삭제&gt;</u></p> <p><u>&lt;삭제&gt;</u></p> <p><u>제21조(직제) (현행과 같음)</u></p> |

현행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라는 단일 조직 내에서 함께 수행하는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지휘·감독권 역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포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사무 수행 조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 지휘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 < 현행법 및 전부개정안의 체계 비교 >

| 현행법                                                      | 개정안                                      | 비고                              |
|----------------------------------------------------------|------------------------------------------|---------------------------------|
| <b>제28조(시·도경찰청장)</b>                                     | <b>제18조(시·도경찰청장)</b>                     | <b>국가경찰 중심 체계로 개편</b>           |
|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 |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아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 | 자치경찰 관련 지휘체계 삭제 및 국가경찰 지휘체계 일원화 |
| (현행 규정 없음)                                               | 개별 사건 수사 지휘권 규정<br>(안 제18조제3항)           | 시·도경찰청장 수사 지휘권 명문화              |
| (현행 규정 없음)                                               | 수사부서장을 통한 지휘·감독 절차 규정<br>(안 제18조제4항)     | 직접 수사개입 제한 장치 도입                |
| <b>제30조(경찰서장)</b>                                        | <b>제20조(경찰서장)</b>                        | <b>경찰서장 권한 조정</b>               |
|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아래 소관 사무를 관장                        | 동일                                       | 현행 유지                           |
| (현행 규정 없음)                                               | 경찰서장의 개별 사건 수사 지휘 제한<br>(안 제20조제3항)      | 경찰서장 수사 지휘권 제한                  |
| (현행 규정 없음)                                               | 예외적 수사 지휘 허용<br>(안 제20조제4항)              | 예외적 지휘 허용                       |
| 지구대·파출소 설치                                               | 순찰대 설치                                   | 경찰 조직체계 개편                      |

특히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아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이는 현행법상 시·도경찰청장이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체계(현행 제28조제3항)에서 벗어나 국가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 및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현행 제28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고 있음.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분리하는 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따라 국가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경찰서장이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아래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면서도(안 제20조제2항),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제3항). 이는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광역 단위인 시·도경찰청에 집중시킴으로써 국가경찰 내부의 수사지휘체계를 재편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수사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경우 수사부서장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8조 제4항 및 제20조제4항). 이는 관서장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을 제한하고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며, 수사지휘가 정해진 지휘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경찰서장은 관할구역 내 치안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지역 치안수요와 개별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지역적 특성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구조가 수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경찰서장에게는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부여하면서도(안 제20조제2항),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안 제20조제3항),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조직 운영 및 현장 대응에 관한 책임과 수사 지휘 권한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또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부여하면서 경찰서장의 수사 지휘는 제한하는 구조가 수사의 통일성과 전문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수사지휘권이 광역 단위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이나 현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사부서장을 통한

지휘 절차가 실제로 관서장의 수사 개입을 통제하는 실효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지 여부 역시 향후 운영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음. 다만 경찰서장의 조직 관리·현장 대응 책임과 수사 지휘 제한 간의 관계, 시·도경찰청장에게 집중되는 수사지휘권의 적정성, 수사부서장을 통한 절차적 통제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상 경찰서장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구대·파출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경찰 조직에는 순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제5항). 이는 현행 국가경찰 조직의 최일선 현장조직인 지구대·파출소를 국가경찰 조직에서 제외하여 자치경찰 조직으로 이관하고, 국가경찰은 순찰대를 중심으로 현장 치안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직체계를 재편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현행 지구대·파출소가 지역 치안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112신고 처리, 범죄 예방, 주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직 개편이 국가경찰의 현장 대응력과 수사 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연계 및 책임소재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 비상사태 등에서의 통합지휘(안 제5절, 제22조)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적 분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치안 대응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lt;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gt;</u></p> <p><u>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u>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u>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u>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u>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u> 자치경찰사무를</p> | <p><u>&lt;제5절 비상사태 등에서의 통합지휘&gt;</u></p> <p><u>제22조(비상사태 등에서의 통합지휘)</u>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통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어 시·도지사를 통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u>국가경찰의 지원·조정이</u>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공무원을 ---</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⑥ (생략)</p> | <p>-----</p> <p>----- .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lt;삭 제&gt;</p> <p>③ -----</p> <p>----- 하려는 경우 -----</p> <p>-----</p> <p>하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그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④ (현행과 같음)</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⑦ <u>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조정의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⑧ <u>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 <p>⑤ <u>시·도지사는 -----</u><br/> <u>-----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u></p> <p><u>&lt;삭 제&gt;</u></p> <p>⑥ <u>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명령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⑦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그 지휘·명령의 범위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u></p> |

현행법 제32조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경찰청장 지휘 역시 동일 조직 내부의 지휘체계 조정

성격이 강하였음.

반면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명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치안정책의 전국적 시행이 필요하거나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통합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한 사유로 시·도지사를 경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현행법 및 전부개정안의 체계 비교 >

| 현행법                                   |                                                      | 개정안                  | 비고                        |
|---------------------------------------|------------------------------------------------------|----------------------|---------------------------|
|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                                                      | 제22조(비상사태 등에서의 통합지휘) | 조문명 및 체계 변경               |
| 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               |                                                      | 시·도지사를 통하여 지휘·명령     |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 경유 지휘체계 도입 |
| 1호                                    | 전시·사변, 대규모 테러·소요사태 등 국가 비상상황 시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 가능 | 동일                   | 현행 유지                     |
| 2호                                    |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전국 단위 치안정책 시행 필요 시 지휘·명령 가능 | 동일                   | 현행 유지                     |
| 3호                                    | 해당 시·도의                                              |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       | 국가경찰·자치경찰                 |

| 현행법                                     |                                  | 개정안                                | 비고                          |
|-----------------------------------------|----------------------------------|------------------------------------|-----------------------------|
|                                         | 경찰력만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찰청장이 지원·조정 | 치안 유지가 어려운 경우 국가경찰이 지원·조정 (제1항제3호) | 분리체계 반영                     |
| 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휘·명령 사유 및 내용을 통보     |                                  | 경찰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휘·명령 사유 및 내용을 통보    | 통보 대상 변경                    |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전달하고, 중단 요청 가능 |                                  |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르도록 규정        | 자치경찰위원회 배제 및 시·도지사 중심 체계 전환 |
| 즉시보고, 제3호의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사전 의결             |                                  | 즉시 보고                              | 제3호에 대한 사전 의결 절차 삭제         |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원·조정 요청                    |                                  | 시·도지사가 지원·조정 요청                    | 지원 요청 주체 변경                 |
|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지휘·명령권 위임 가능        |                                  |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지휘·명령권 위임 가능       | 지휘권 위임 대상 확대                |
| (현행 규정 없음)                              |                                  | 국가경찰공무원 간주 규정 (안 제22조제7항)          | 통합지휘 시 법적 지위 명확화            |

이는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 조직으로 운영하는 개정안의 구조 아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치안 대응체계를 유지하되 평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원칙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시·도지사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직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의 통합지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조화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통합지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안 제22조제7항), 이는 국가적

재난이나 광역적 치안 위기 상황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지휘체계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상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는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행하던 지휘·명령의 전달 및 중단 요청 기능을 삭제하고(현행 제32조제3항),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의 통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22조제2항). 이에 따라 통합지휘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가 형성되는바,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통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 치안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현행 제32조제4항), 개정안은 이러한 사전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즉시 보고 및 사후 통제 체계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2조제3항).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제3호 사유에 대한 사전적 민주적 통제 절차가 축소된다는 점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안 제22조제1항 단서)4), “긴급한 사유”의 범위 및 직접 지휘가 허용되는 기준이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종합하면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적 분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보하려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국가적 재난이나 광역적 치안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시·도지사 경우 지휘체계의 실효성, 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 기능 변화 등이 실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민주적 통제를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어 시·도지사를 통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 (3) 자치경찰(안 제3장)

#### 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안 제1절, 제24조~제32조)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전제로, 자치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감독 및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본적인 설치 구조는 유지하되, 자치경찰의 조직·인사·예산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고 있음.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u>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u>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u> ----- <u>시·도지사</u> -----<br>-----<br>--. 다만, 제12조 -----<br>-----<br>-----<br>-----<br>-----.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은 특정 <u>성(性)</u> 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u>성이</u> -----<br>-----<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후단 신설>                                                                                            |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br>-----<br>-----<br>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서 주로 거주·활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② ~ ⑥ (생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⑦ (생략)                                                                                                                                                                      | ⑦ (현행과 같음)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 4. -----<br>-----<br>-----<br>-----<br>-----<br>-----<br>---. ---, 제26조제3항 -----<br>-----<br>-----<br>-----. |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
| ⑧ (생략)                                                                                                                                                                      | ⑧ (현행과 같음)                                                                                                   |
| 제21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① ~ ③ (생략)                                                                                                                                        | 제27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제22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략)                                                                                                                                           | 제2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
| 제2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 ③                                                                                                                                        | 제2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 ③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생략)</p> <p>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p> <p>&lt;신설&gt;</p> <p>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p> <p>&lt;신설&gt;</p> <p>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그 운영지원</p> <p>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p> <p>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p> <p>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p> <p>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p> | <p>(현행과 같음)</p> <p>제3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p> <p>1.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대한 결정</p> <p>가. 자치경찰 활동에 -----에 관한 사항</p> <p>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p> <p>다. 자치경찰의 조직, ---, ---, 사무, ---, ---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자치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p> <p>라.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후보자 추천 등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p> <p>마. 자치경찰의 -----에 관한 사항</p> <p>&lt;삭제&gt;</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u></p> <p><u>&lt;신 설&gt;</u></p> <p>7. <u>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 퇴</u></p> <p>8. <u>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u></p> <p>9. <u>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u></p> <p>10. <u>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u></p> <p>11. <u>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u></p> <p>12. <u>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u></p> <p>13. <u>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u></p> <p>14. <u>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u></p> <p>15. <u>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u></p> | <p>바. <u>자치경찰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u></p> <p>사. <u>자치경찰에 대한 민원처리 요구에 관한 사항</u></p> <p>아. <u>자치경찰에 대한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u></p> <p>자. <u>자치경찰의 고충심사,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과 징계요구 및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p> <p><u>&lt;삭 제&gt;</u></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청장과 협의</u></p> <p><u>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u><br/><u>· 조정 요청</u><br/><u>&lt;신 설&gt;</u></p> <p><u>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u><br/><u>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u><br/><u>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u><br/><u>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u><br/><u>의결</u><br/><u>&lt;신 설&gt;</u></p> | <p><u>차.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u><br/><u>의신청의 처리요구에 관한</u><br/><u>사항</u></p> <p><u>카. 자치경찰 임무 외에 다른</u><br/><u>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u><br/><u>요청에 관한 사항</u></p> <p><u>타. -----, 자치</u><br/><u>경찰본부장이 -----</u><br/><u>-----</u><br/><u>-----</u></p> <p><u>2. 해당 시·도경찰청장에 대하여</u><br/><u>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의</u><br/><u>견 제시</u></p> <p><u>가. 자치경찰 직무수행과 관련</u><br/><u>하여 해당 시·도경찰청장</u><br/><u>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u><br/><u>위원장의 업무협약의 체결</u><br/><u>및 변경과 관련한 사항</u></p> <p><u>나. 국가·자치경찰의 공동사무</u><br/><u>수행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u><br/><u>사항</u></p> <p><u>3. 해당 시·도경찰청장과 협력·</u><br/><u>조정이 어려운 경우 국가경찰</u><br/><u>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u></p> <p><u>4. 자치경찰규칙의 제정·개정 또</u></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p> <p>② ~ ⑤ (생략)</p> <p>&lt;신설&gt;</p> <p>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략)</p> <p>&lt;신설&gt;</p> <p>④ (생략)</p> <p>제27조(사무기구)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p> <p>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p> | <p>는 폐지에 관한 사항</p> <p>&lt;삭제&gt;</p> <p>제31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 제30조-----.</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자치경찰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제32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제33조에 따른 자치경찰본부에서 수행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u></p> <p>③ <u>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u></p> <p>④ <u>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u></p> |       |

안 제24조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치 형식 자체는 현행과 유사함. 다만 개정안은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하고(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현행 경찰서장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대장 소속으로 재편하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적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음. 또한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 후보자 추천권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는 한편(안 제30조제1호라목 및 마목), 현행법상 위원회 사무기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치경찰본부가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안 제32조제4항)에서 자치경찰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운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보다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안 제25조 및 제26조는 위원 구성, 임명절차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면서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 및 시·도지사 등 다양한 주체가 위원 추천 및 임명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활동 경력자 및 경찰·검찰·군 출신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현행 체계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음. 특히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위원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주로 거주·활동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안 제26조제1항 단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경우에도 지역 치안 여건과 주민 수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사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 운영의 지역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한편 개정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 현행법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인사·예산 정책, 감사 및 징계 요구 등과 함께 시·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경찰서장 평가 결과 통보, 국가경찰과의 협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현행 제24조), 개정안은 자치경찰 활동 목표 수립, 조직·인사·예산 운영,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 후보자 추천, 감찰 및 징계 요구 등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30조제1호).

이는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시·도자치경찰 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자치경찰의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 후보자 추천 권한을 부여한 것(안 제30조제1호라목)은 자치경찰 인사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현행 제24조제1항제15호)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협약, 공동사무 수행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30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동일 조직 내부의 기능 구분이 아니라 상호 독립된 조직체계로 전제하고, 기관 간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립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특히 조직적 분리가 확대될수록 공동 대응이 필요한 치안사무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협약 및 분쟁조정 절차를 법률상 명문화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 충돌이나 관할상 혼선을 예방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의 조직·인사·예산 운영 및 주요 보직자 추천 등에 관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적 분리가 확대될 경우 업무협약이나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할 충돌과 협력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개정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자치경찰 운영의 핵심 의사 결정기구로 재편하고 자치경찰의 조직·인사·예산 등에 관한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실질적 독립성과 지방 치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만 확대된 권한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조정체계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현행법 및 전부개정안의 체계 비교 >

| 현행법                                                                          | 개정안                                          | 비고                        |
|------------------------------------------------------------------------------|----------------------------------------------|---------------------------|
| 제18조~제27조                                                                    | 제24조~제32조                                    | 조문 체계 이동                  |
| 시·도자치경찰위원회<br>시·도지사 소속 합의제<br>행정기관                                           | 동일                                           | 현행 체계 유지                  |
| 위원 구성·임명방식·<br>결격사유 규정                                                       | 대체로 동일                                       | 현행 유지                     |
|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위원<br>포함                                                           | 동일                                           | 국가경찰과의 연계 유지              |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br>소관 사무를<br>자치경찰사무 중심 규정                                        | 자치경찰<br>조직·인사·업무협약·<br>분쟁조정 중심 재구성           | 자치경찰 운영권한 확대              |
| 시·도경찰청장 임용 협의,<br>경찰서장 평가·결과 통보<br>등 국가경찰 조직에 대한<br>관여 규정 포함<br>(제24조제1항제6호) | 해당 규정 삭제                                     | 국가경찰과<br>자치경찰<br>조직 분리 반영 |
| -                                                                            |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br>대장 후보자 추천 및<br>자치경찰공무원 인사 운영 | 독자적 인사체계 강화               |

| 현행법                                             | 개정안                                    | 비고                 |
|-------------------------------------------------|----------------------------------------|--------------------|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 사무의 협력·조정 관련 경찰청장과 협의 (제24조제1항제15호)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협약 및 공동사무·분쟁조정 등        | 국가경찰·자치경찰 협력체계 제도화 |
| -                                               | 부당한 수사지휘 이의신청 처리요구 규정 신설 (안 제30조제1호차목) | 수사지휘 이의신청 절차 도입    |
|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 자치경찰본부가 사무 수행                          | 자치경찰본부 중심 운영체계 전환  |
| 사무기구에 경찰공무원 배치(제27조제2항)                         | 해당 규정 삭제                               | 자치경찰 전담조직 체계 반영    |

## 나.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안 제2절, 제33조~제40조)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운영체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적인 자치경찰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 <p><u>&lt;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gt;</u></p> <p><u>제33조(자치경찰의 조직 및 정원)</u></p> <p>①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경찰본부를 둔다.</p> <p>② 자치경찰본부장 소속으로 시, 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자치경찰대(이하 “시·군·구 자치경찰대”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군·구를 통합·분할하여 관할하는 자치경찰대를 둘 수 있다.</p> <p>③ 시·도의 광역적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본부장 직속으로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p> <p>④ 자치경찰본부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구</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u>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u></p> <p><u>제34조(자치경찰본부장) ① 자치경찰본부에 자치경찰본부장을 두며, 자치경찰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p><u>②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치안감, 자치치안감 또는 자치경무관으로 보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본부장을 해당 자치경찰본부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해당 자치경찰본부장에 보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차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 있어 「경찰공무원법」 규정에 의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자치경찰공무원</u></li> <li><u>2.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국가경찰공무원</u></li> <li><u>3. 1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총경·자치총경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사람</u></li> <li><u>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u></li> </ol>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 <p>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6.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③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공모를 통해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공모를 통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경찰본부장이 될 수 없다.</p> <p>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p> <p>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lt;신 설&gt;</p> | <p>5.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판사·검사의 직 또는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⑤ 자치경찰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 자치경찰본부장의 직급기준·임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35조(자치경찰대장) ① 시·군·구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대장을 두며, 자치경찰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제37조에 따른 자치경찰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무관, 자치총경 또는 자치경정으로 보한다.</p> <p>③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는 경우 자치경찰본부장과 해당 시·군·구의</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lt;신 설&gt;</p> | <p>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자치경찰대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p> <p>⑤ 자치경찰대장의 직급기준·임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36조(112종합상황실) ①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은 112신고를 포함한 각종 치안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접수 및 처리, 상황의 분석·판단·전파, 현장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112종합상황실에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③ 112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출동·응원 등을 지휘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112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2. 자치경찰사무 :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p> <p>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p> <p>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p> <p>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p> <p>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p> <p>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p> <p>&lt;신 설&gt;</p> <p>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p> <p>&lt;신 설&gt;</p> | <p>&lt;삭 제&gt;</p> <p>제37조(자치경찰의 사무) ① 자치경찰사무는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p> <p>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 사항</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p> <p>라. -----</p> <p>----- 가정·학교·-----</p> <p>마.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업무</p> <p>바. -----</p> <p>----- . &lt;후단 삭제&gt;</p> <p>사.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 가출인의</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p> <p><u>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u></p> <p>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p> <p>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p> <p>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p> <p>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p> <p>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p> <p>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p> <p><u>&lt;신 설&gt;</u></p> <p>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p> | <p><u>발견을 위한 수색</u></p> <p>아. (현행과 같음)</p> <p>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항</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현행과 같음)</p> <p>바. (현행과 같음)</p> <p>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p> <p>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에 대한 경비</p> <p>나. 지역축제 등 각종 -----</p> <p>-----</p> <p>③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안에 한하여 수사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lt;신 설&gt;</u></p> <p>1) <u>학교폭력 등 소년범죄</u></p> <p>2) <u>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u></p> <p>3) <u>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u></p> | <p>까지는 범죄의 중대성, 광역성, 연쇄성 등에 비추어 국가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p> <p>2.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형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규정된 범죄</p> <p>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p> <p>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학교폭력” 중 「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p> <p>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p> <p>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52조제1호, 제154조부터 157조까지</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lt;신 설&gt;</u></p> <p>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p> <p><u>&lt;신 설&gt;</u></p> <p>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p> <p><u>&lt;신 설&gt;</u></p> | <p>에 규정된 범죄</p> <p>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 제4조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외한다.</p> <p>마. 「형법」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범죄</p> <p>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p> <p>가. 「아동복지법」</p> <p>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p> <p>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라. 「노인복지법」</p> <p>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p> <p>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5) <u>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u></p> <p>② <u>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u></p> <p>③ <u>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lt;신 설&gt;</u></p> | <p><u>벌에 관한 법률</u></p> <p>사. 「<u>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p> <p>아. 「<u>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u>」</p> <p>자. 「<u>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u>」</p> <p>차. 「<u>교통안전법</u>」</p> <p>카.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p> <p>타. 「<u>범죄피해자 보호법</u>」</p> <p>파. 「<u>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u>」</p> <p>하. 「<u>경범죄 처벌법</u>」</p> <p><u>&lt;삭 제&gt;</u></p> <p>④ <u>제3항의 수사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⑤ 「<u>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u>」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⑥ <u>시·도지사는 제3항부터 제5</u></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lt;신 설&gt;</p> | <p>항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자치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p> <p>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무와 관련한 자치경찰의 권한과 의무는 국가경찰과 같다.</p> <p>제38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시·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한다.</p> <p>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표준협약안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협약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역할분담에 따른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li> <li>2. 사건·사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li> <li>3.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등</li> </ol> <p>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시·도경찰청장이 의견을 달리하여 제1항에 따른 협약</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lt;신 설&gt;</p> | <p>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가경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이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u></p> <p>④ 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분담·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기준, 협약 체결 및 제2항에 따른 표준협약안의 제정·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자치경찰 활동목표의 수립 및 평가) ① 시·도지사는 매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거쳐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lt;신 설&gt;</p> | <p><u>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시·도자치경찰 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p> <p><u>③ 그 밖에 자치경찰 활동목표의 수립·평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u></p> <p><u>제40조(자치경찰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거쳐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u>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긴밀한 업무협조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u></p> <p><u>③ 제35조에 따른 자치경찰대장은 상호 지원·협력 등을 통한 지방자치행정과 자치치안행정의 연계 및 공동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장과 상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u></p> |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대를 두도록 하고 있음(안 제33조). 또한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의 임명 절차와 지휘체계를 별도로 규정하여 국가경찰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특히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34조 제3항), 자치경찰대장 역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되,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본부장 및 해당 시·군·구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5조제3항). 이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대한 지방 차원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또한 안 제37조는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사무를 자치경찰의 기본 사무로 규정하는 한편, 학교폭력·가정 폭력·교통범죄 등 일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사무도 자치경찰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분권적 치안체계를 실질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분리하면서도 상호 협력체계도 함께 마련하고 있음. 안 제38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을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조직적 분리에 따른 관할 충돌과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안 제36조는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에 112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12종합상황실장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출동 및 응원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6조).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면서도 긴급신고 대응과 현장조치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또한 안 제39조 및 제40조는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활동 목표를 수립·평가하고 인력·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별 치안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의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사무 분장 기준이 전반적으로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예를 들어 안 제37조제2항제1호사목은 18세 이상 가출인 수색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실종·가출 사건은 강력범죄나 인신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고 광역적인 수색이나 신속한 초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음. 따라서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안 제37조제3항은 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범죄 및 일부 성범죄 등을 자치경찰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군 내에서도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 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이 실제 치안현장에서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일반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면서도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범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면서 난폭운전이나 교통안전시설 손괴 등은 국가경찰 사무로 남겨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범죄는 실제 현장에서 함께 발생하거나 동일 사건 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범죄 유형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 권한을 구분한 기준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안 제38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분담의 상당 부분을 협약에 위임하고 있는바, 지역별 협약 내용에 따라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간 구체적인 역할부담이나 사무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사건에서 지휘

체계 및 책임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실제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한편 안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자치경찰의 조직·인력 및 장비 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도 단위로 이관될 경우 지역별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의 차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조직 규모나 치안서비스 수준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역 간 치안서비스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조정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자치경찰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사무를 자치경찰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적 치안체계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구분의 적정성, 협력체계의 실효성 및 지역 간 치안서비스 격차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안 제3절, 제41조~제43조)

개정안은 자치경찰을 독립적인 치안 수행기관으로 운영하면서도 국가경찰과의 연계 및 통제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 <p><u>&lt;제3절 자치경찰의 직무 수행&gt;</u></p> <p><u>제41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p><u>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u></p> <p><u>2. 같은 법 제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7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는 “자치경찰본부·대 등 자치경찰관서”로 본다.</u></p> <p><u>3. 제4조제5항·제6항, 제11조의3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중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대장”으로 본다.</u></p> <p><u>4. 제8조의2 본문, 제11조의3제1</u></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lt;신 설&gt;</p> | <p>항·제2항·제4항·제5항 중 “경찰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p> <p>5. 제9조 본문 중 “경찰서”는 “자치경찰본부 또는 자치경찰대”로 본다.</p> <p>6. 제11조의2제1항 중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p> <p>7. 제11조의3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중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본부장”으로 본다.</p> <p>제42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①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에 한한다.</p> <p>② 자치경찰공무원이 휴대한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무기의 사용자·사용일시·장소·대상 및 경위 등을 소속 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자치경찰대장을 거쳐 즉시 해당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자치경찰공무원이 휴대·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lt;신 설&gt;</p> | <p>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3조(범죄 발견시의 조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제37조제3항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각 해당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증거물 보존 등 적절한 초동조치를 한 후 범죄의 내용, 증거물 및 관련사무를 소속 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자치경찰대장을 거쳐 해당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자치경찰공무원은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검거할 수 있다.</p> <p>③ 자치경찰공무원은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현행범인,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사람 및 제2항에 따라 검거한 사람을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p> <p>④ 자치경찰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하게 수행한 체포, 증거 확보 등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 <u>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본다.</u><br><u>⑤ 자치경찰공무원은 국가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무를 인계받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u> |

안 제41조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은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방지조치 및 범죄예방조치 등 국가경찰과 유사한 직무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관련 규정에서의 경찰관·경찰관서·경찰청장·경찰서장 등은 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관서, 시·도지사, 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자치경찰대장 등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안 제41조).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구조 아래에서도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집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권한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인정함으로써 자치경찰이 단순한 보조조직이 아니라 독립적인 치안 수행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42조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무기 휴대 및 사용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신청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무기사용의 통제 및 오남용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무력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제 장치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무기를 휴대·사용하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에 대해서만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의 실질적 독립성과 국가 차원의 통제 간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실제 강력범죄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 역시 국가경찰과 유사한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을 사전에 승인하는 구조는 자치경찰의 현장 대응력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변 안전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안 제43조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치경찰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를 발견한 경우 필요한 초동 조치를 수행한 후 국가경찰에 사건을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3조제1항). 또한 관할 외 범죄의 현행범이나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이러한 체포·증거확보 등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안 제43조제4항).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자치경찰이 우연히 발견한 범죄에 대하여 초동조치와 긴급 검거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분리에 따른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음.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반복적인 사건 인계 및 협조 절차로 인해 행정 비효율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특히 범죄 유형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건의 경우 어느 기관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담당할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의 연속성이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음.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사건 이첩 및 협의 과정에서 관할 다툼이나 수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라. 경찰 상호 간의 관계(안 제4절, 제44조~제49조)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면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조정 및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치안행정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 <p><u>&lt;제4절 경찰 상호 간의 관계&gt;</u></p> <p><u>제44조(상호 협조 및 응원)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자치경찰 상호 간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료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u></p> <p><u>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 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상호 간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국가·자치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④ 제2항에 따라 응원을 위하여 지원된 국가 혹은 자치경찰공무원은 응원을 요청한 국가·자치경찰관서의 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u></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 <p>⑤ 제2항에 따른 응원절차, 규모, 경비 부담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약으로 정한다.</p> <p>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유·무선 통신망과 시설물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p>                                                                                                           |
| <신 설> | <p>제45조(112 신고출동 및 응원)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112종합상황실로부터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한 출동요구를 받은 경우 소관 사무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출동·응원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출동을 지연한 경우 112종합상황실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자치경찰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
| <신 설> | 제46조(경찰통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통계자료를 해당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47조(조례 등의 통보)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때에는 조례는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lt;신 설&gt;</p> | <p>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해당 시·도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8조(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p> <p>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9조(자치경찰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시·도 자치경찰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다.</p> <p>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따른다.</p> |
| <p>&lt;신 설&gt;</p> |                                                                                                                                                                                                                                                                                                                                                                                                      |

개정안은 안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상호 협조 및 응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112종합상황실의 출동 요구에 대해서는 소관 사무와 관계없이 즉시 출동·응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안 제46조 및 제47조는 경찰통계 관리 및 자치경찰 관련 조례·

규칙의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8조 및 제49조는 치안행정 협의회 설치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가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도 치안행정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안 제45조제1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112종합상황실로부터 출동 요구를 받은 경우 소관 사무와 관계없이 즉시 출동·응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긴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 지연을 방지하고 현장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또한 안 제44조제6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유·무선 통신망 및 시설물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 분리에 따른 현장 대응의 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상호 응원과 공동 대응을 폭넓게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실익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안 제44조 및 제45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응원 및 공동 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 사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동시에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휘권 행사와 책임 관계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있음.

예를 들어 가정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와 같이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특수폭행, 중상해, 음주운전, 도주범 검거 등 국가경찰 관할 요소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는 어느 기관이 현장 지휘권을 행사하고 사건을 최종적으로 담당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특히 안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는 상황에서는 초동조치 이후 사건 분류·이첩·지휘 체계가 반복적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지휘체계의 복잡성이 증가할 우려도 있어 보임.

다음으로, 안 제44조제4항은 응원을 위하여 지원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응원을 요청한 기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장 대응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기관의 지휘를 받거나 반대로 자치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기관의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 지휘·감독 책임과 징계·복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또한 안 제44조제5항은 응원절차·규모·경비 부담 등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역별 협약 내용에 따라 응원 범위나 협력 수준이 상이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음. 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치안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분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상호 협조·응원, 공동 출동, 통신망 공동 이용, 분쟁조정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치안행정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다만 실제 현장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휘체계 및 책임관계의 명확성, 협약 중심 협력체계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감독(안 제5절, 제50조~제59조)

개정안은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자율성과 국가 차원의 치안 통일성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lt;제8장 보칙&gt;</u></p> <p>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p> <p>③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p> | <p><u>&lt;제5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감독&gt;</u></p> <p>제50조(예산과 처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자치경찰의 설치·운영에 -----<br/>-----<br/>-----, <u>&lt;후단 삭제&gt;</u></p> <p><u>&lt;삭 제&gt;</u></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p><u>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 <p><u>③ 경찰청장과 시·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신분·처우 등에 있어 국가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u></p> <p><u>제51조(자치경찰특별회계의 설치)</u></p> <p><u>①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u>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p><u>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u></p> <p><u>2.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태료 및 범칙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u></p> <p><u>3. 그 밖의 수입금</u></p> <p><u>③ 국가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u></p> <p><u>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u></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 <p>1. <u>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포함한)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u></p> <p>2. <u>자치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u></p> <p>3. <u>제37조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u></p> <p>4. <u>자치경찰 활동을 위한 장비·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비</u></p> <p>5. <u>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u></p> |
| <신 설> | <p>제52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도)<br/> <u>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나 그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조언·권고 또는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경찰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p>                                                                |
| <신 설> | <p>제53조(자치경찰사무 중 국가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안전부</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 <p>장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
| <신 설> | <p>제54조(시정명령)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
| <신 설> | <p>제55조(직무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89조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
| <신 설> | <p>제56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p>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신 설> | <p>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59조(법률안 의견 제출) ①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현행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p> |

개정안은 안 제50조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처우 보장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1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태료·범칙금 총액에 상당하는 국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지도·감독,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 권한 등을 규정하여 국가사무에 대한 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58조 및 제59조는 자치경찰지원관

제도 및 시·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치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제와 감독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안 제51조는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치경찰 운영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치경찰 운영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치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음.

다만, 안 제51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재원에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태료·범칙금 총액에 상당하는 국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자립도와 치안 수요 차이가 큰 상황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치경찰 인력·장비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또한 과태료·범칙금 수입 규모 역시 지역별 교통량, 단속 환경 및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경찰 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안정적인 세원 확보 방안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다음으로, 안 제50조제3항은 자치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방직 공무원 체계 내에서 국가경찰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복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인건비 및 복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인력 확보 및 조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음.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자치경찰 조직 내부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한편 개정안은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안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에서 자치경찰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고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지도·감독,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감사 및 재의요구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이는 국가사무의 적정한 수행과 전국적 치안 수준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자치경찰의 자율성과 국가의 감독권 간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자치경찰이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더라도 국가사무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경우 국가의 지도·감독이 자치경찰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종합하면 개정안은 자치경찰특별회계 설치, 국가의 재정 지원 및 처우

보장 규정을 통하여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체계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치안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다만 자치경찰의 재정 기반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국가의 감독권과 자치경찰의 자율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44 |